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자원배분

- 일시 : 2012. 9. 12(수) 10:00~12: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2. 9. 12 (수)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자원배분

개 회 (10:00~10:20)	개 회 사	주 영 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강 창 희	국회의장
	축 사	장 윤 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회 (10:20~12:00)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자원배분		
	영상시청	2013년 경제여건 및 재정총량 소개 2013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국민과 재정전문가의 목소리	
	토론주제	재 정 총 량 : 경제여건, 총지출, 국가채무 사 회 예 산 : 복지, 교육 지 방 재 정	
토 론 단	사 회	신 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김 학 용	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 영 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예결위원
		김 춘 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전 주 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하 연 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홍 인 표	경향신문 논설위원

개 회 사

주 영 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장운석 예결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정기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회에 응해주신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님, 홍영표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를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전주성 교수님,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님, 경향신문 홍인표 논설위원님,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보좌진, 학계, 관계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재정 규모와 운용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안에 ‘국회의 재정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이후 네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2013년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금융위기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미래의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 및 재정전문가의 지혜와 국민들의 목소리로부터 국가재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장운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2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격려사

강창희 국회의장



격 려 사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2013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삼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결집되고 합리적으로 조율, 반영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민의의 결집체이자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를 보면 국회가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의 60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므로 사실상 그 심의기간이 더욱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 힘겨운 민생을 지원하고 각 지역 핵심 현안도 최대한 풀어주어야 합니다. 건전 재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부족한 시간 안에 이 같은 이중삼중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겸허하게 수렴해야 합니다.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저는 “국민에게는 세 번 묻겠다”는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그 다짐을 실천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쯏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와 운용방향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재정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2
국회의장 강 창 희

축 사

장 윤 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축 사

반갑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정기국회의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마련한 『나라살림 대토론회』가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가 재원의 배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예산안 심의 기간의 부족과 정부 주도의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는 임기 5년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날로 증대되는 복지 소요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규모와 재정 지출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는 여건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전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재정 민주주의가 한층 고양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고견을 가감 없이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향후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9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재원배분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토론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윤 석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자원배분

I. 재정운용 여건

1. 대외경제 여건 / 3
2. 국내경제 여건 / 5

II. 2013년 재정총량

1. 재정규모 / 8
2. 분야별 자원배분 / 9
3. 재정수지 / 11
4. 국가채무 / 13

III. 분야별 자원배분의 특징

1. R&D 분야 / 14
2. SOC 분야 / 21
3. 보건·복지·노동 분야 / 31
4. 교육 분야 / 40
5. 지방재정 분야 / 45

I 재정운용 여건

1. 대외경제 여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반등세를 보인 세계경제가 2012년 2/4분기 이후 남부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1/4분기 중 각각 1.8%, 2.0%(전기비 연율) 성장했던 미국경제가 2/4분기에는 1.5%로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도 2011년 4/4분기와 2012년 1/4분기 중 각각 0.8%, 0.0%(전년동기비)에 그친 데 이어 2/4분기에는 0.4% 감소했다. 2011년 4/4분기와 2012년 1/4분기 중 각각 8.9%, 8.1%(전년동기비) 성장한 중국경제는 2/4분기 중 7.6%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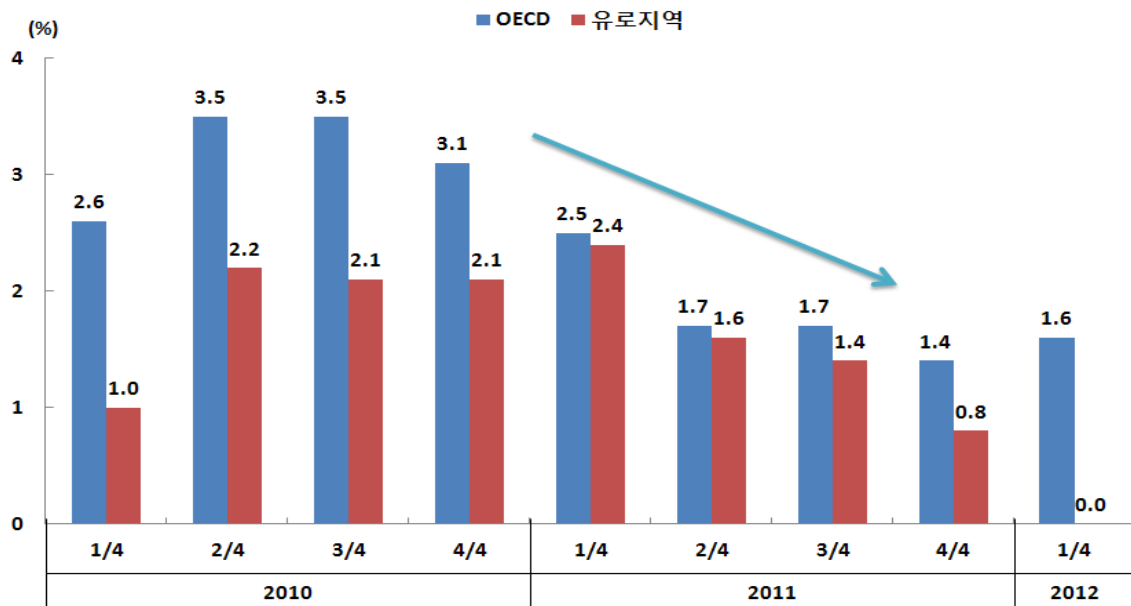
	2011	2012	
		1/4	2/4
미 국	1.8	2.0	1.5
일 본	-0.7	1.3	0.3
유로지역	1.5	0.0	-0.4
중 국	9.2	8.1	7.6

주: 1. 미국과 일본은 전기비연율
2. 유로지역과 중국은 전년동기비

자료: Bloomberg

세계경제는 2010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3/4분기 중 3.5% 성장한 OECD경제가 2011년 1/4분기 중 2.5%로 둔화되었고 2012년 1/4분기에는 1.6%로 낮아지면서 성장세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1] OECD와 유로지역 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주: 전년동기비

자료: OECD

OECD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인 경기부양효과 약화와 민간부분의 경제 회복지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유로지역의 경기위축에 기인한 것이다. 유로지역의 경기위축은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2년 세계경제는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IMF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성장률(3.9%)보다 0.4%p 낮아지는 것이다. 2012년 중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1.6%(OECD전망)로 2011년(1.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IMF	5.3	3.9	3.5	4.1
OECD	3.2	1.8	1.6	2.2
노무라	5.3	3.9	3.2	3.5
IBRD	5.3	3.9	3.2	3.7
글로벌 인사이트	5.3	3.9	2.7	3.0

주: OECD 전망치는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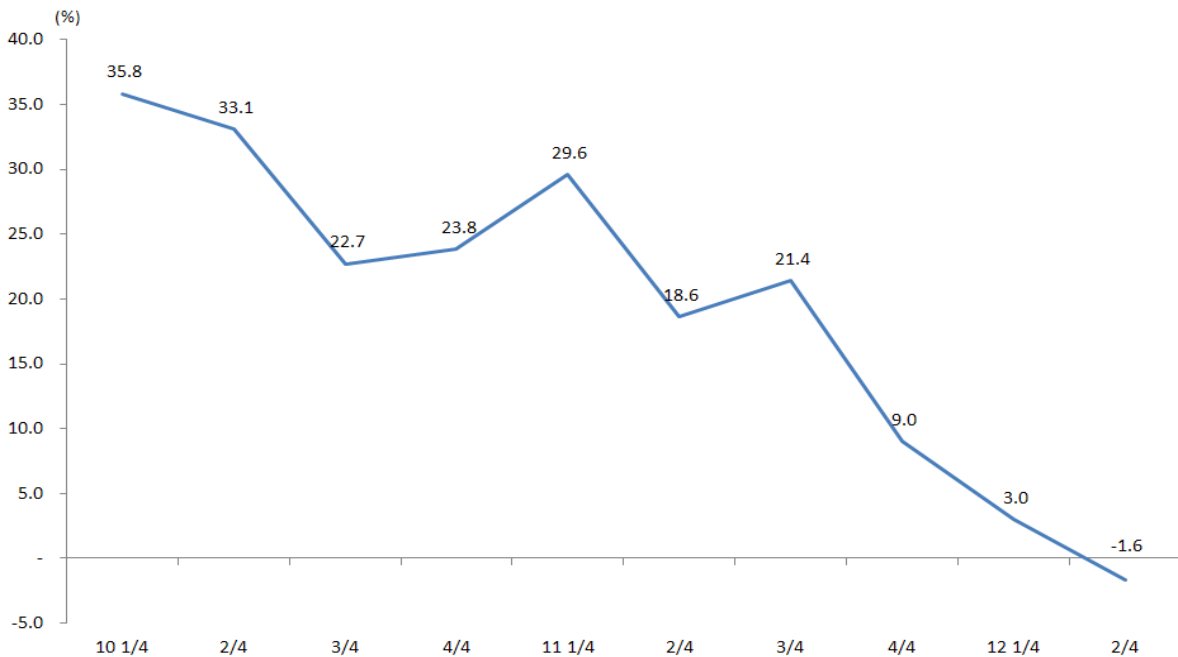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 4), OECD(Economic Outlook. 2012. 5), 노무라증권(세계경제전망 2012. 8)

2. 국내경제 여건

세계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국내경기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2011년 중 19.0%증가했던 수출액(통관기준)이 2012년(1-7월) 중에는 오히려 0.8%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세계 경기 둔화로 주요국의 수입수요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중 15.1%가 증가했던 미국의 수입액(통관기준)이 2012년 1/4분기에 8.3%로 둔화되었고, 유로지역의 수입증가율도 동기간 중 각각 12.6%에서 3.8%로 낮아졌다. 중국의 수입은 2011년 24.9% 증가에서 2012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7.1%, 6.5%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반등 추세를 보였던 국내주가(코스피)가 유럽재정위기의 충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11년 2/4분기 말 2,100대를 기록했던 종합주가지수가 2012년 7월 말에는 1,843.8로 12.2% 하락하였다. 국내 금리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국제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1년 2/4분기 말 4.29%인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2012년 7월 말에는 3.13%로 낮아졌다.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의 위축(2010년 4/4분기: 177억 달러 순유입 → 2011년 4/4분기: 30억 달러 순유입 → 2012년 2/4분기: 75억 달러 순유출)으로 원/달러 환율이 2011년 2/4분기 말 1,067.7원에서 2012년 7월 말에는 1,137.6원으로 6.5% 상승했다.

[그림 2]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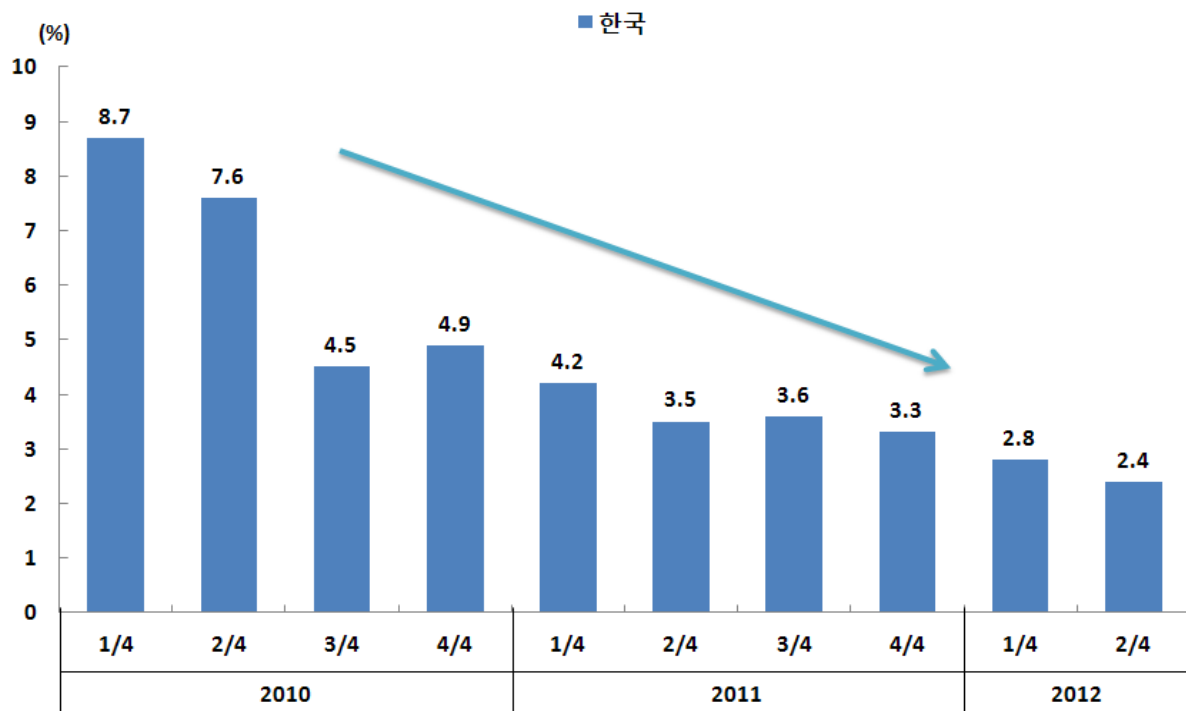
주: 통관기준 수출

자료: 관세청

수출위축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내수경기도 동반하여 위축되고 있다. 2011년 2.3% 증가한 민간소비가 2012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1.6%, 1.2%로 둔화되었고, 2011년 3.7% 늘었던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중 2.9% 감소했다.

내수위축과 수출부진 등으로 2011년 3.6% 성장한 국내경제가 2012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2.8%, 2.4%(전년동기비)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되어 2012년 중 국내경제는 2% 중후반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주: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중 세계경제는 민간부분의 자생적 경기회복(미국의 주택경기 개선 등),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개도국들의 정책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유럽재정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 약화(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축소 예상) 등으로 2012년(3.5%)보다 높은 4.1% 성장이 예상(IMF전망)되고 있다.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3년 국내경제도 2012년(2% 중후반 성장 예상)보다 높은 3% 중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표 3]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2011	2012	2013
IMF (2012.4)	3.6%	3.5%	4.0%
IBRD (2012.6)	3.6%	3.2%	3.7%
한국은행 (2012.7)	3.6%	3.0%	3.8%
KDI (2012.5)	3.6%	3.6%	4.1%
행정부 (2012.6)	3.6%	3.3%	4.1%
NABO	3.6%	2% 중후반	3% 초중반

주: 1. NABO 수치는 미확정 내부자료

2. () 수치는 전망 시점

자료: IMF, IBRD,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II 2013년 재정총량

1. 재정규모

정부는 2013년 예산으로 346.6조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2012년 예산에 비해 21.2조원(6.5%)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예산은 248.0조원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지출은 98.6조원을 요구하여 전년대비 각각 20.2조원(8.8%) 및 1.2조원(1.2%) 증가하였다. 2013년 예산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요구액 증가율 7.0%¹⁾ 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한 미래대응 여력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등을 중점 검토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 4] 2013년 예산요구액 현황

(단위: 조원, %)

	2012년 (A)	2013년 요구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지 출	325.4	346.6	21.2	6.5
- 예 산	228.0	248.0	20.0	8.8
- 기 금	97.4	98.6	1.2	1.2

자료: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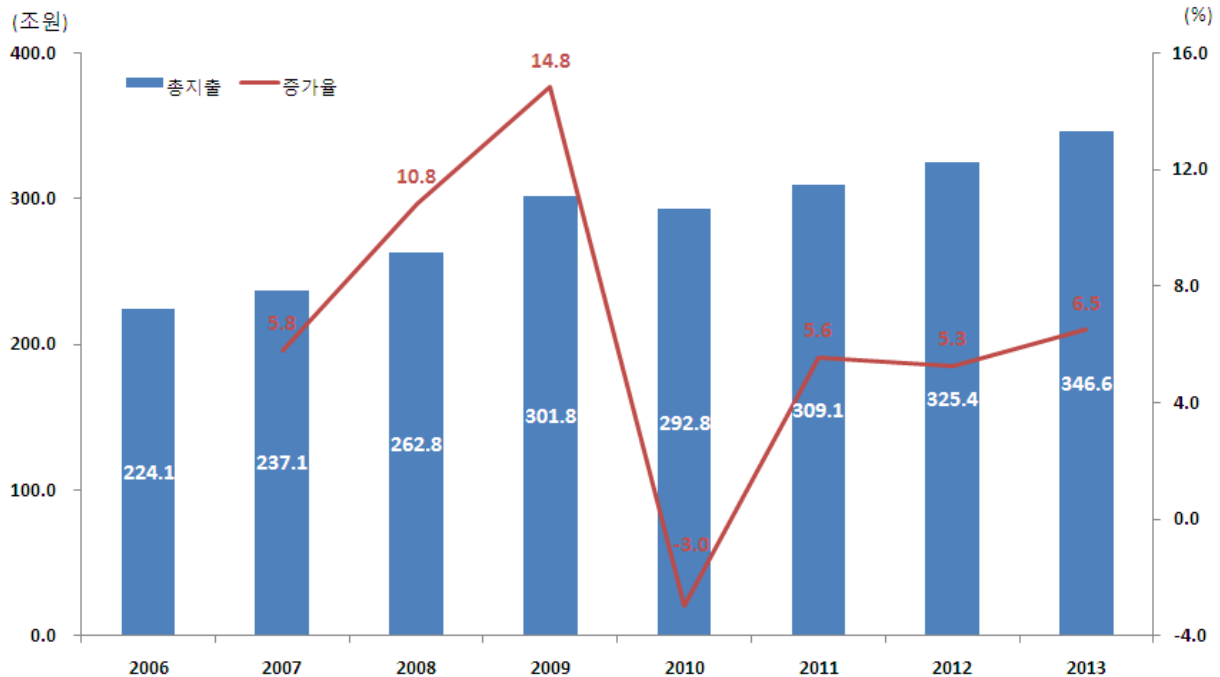
2013년 예산요구액(346.6조원)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2013년 총지출 341.9조원 보다 4.7조원 많은 수준이다.

2013년 총수입은 구체적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2012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²⁾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주식시장의 전반적 침체를 반영하여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계획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1) 연도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및 2012년 7.6%이다.

2) 「2011~2015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3년 총수입은 375.7조원으로 국세수입 224.2조원, 세외수입 35.2조원 기금수입 116.3조원이다.

[그림 4] 총지출 추이



주: 2006~2012년 총수입·총지출은 최종예산 기준이며, 2013년 요구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각 연도) 및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2012. 7. 2)

2. 분야별 자원배분

2013년도 분야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보건·복지·노동,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는 2012년 예산 대비 증액 요구하였으며, SOC, 환경,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물식품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하였다.

2012년 대비 분야별 요구액 증가율이 총지출(요구) 증가율 6.5%보다 높은 분야는 교육(10.1%), 국방(7.6%) 및 일반공공행정(6.3%) 분야로서, 교육 분야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3.6조원),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에 따라 증가하였고,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증가(+3.4조원) 등에 따라 증액 요구되었다. SOC, 환경, 농림수산물식품 분야는 4대강 사업 완료 등에 따른 투자 감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감액 요구되었다.

[표 5] 2012년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분 야	2012 (A)	2013 요구 (B)	증감 (B-A)	증감률 (B-A)/A
보건·복지·노동	92.6	97.5	4.9	5.3
교 육	45.5	50.1	4.6	10.1
문화·체육·관광	4.6	4.3	-0.3	-5.5
환 경	5.9	5.6	-0.4	-6.6
R&D	16.0	17.0 ³⁾	1.0	6.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4.3	-0.8	-5.4
SOC	23.1	20.8	-2.3	-10.1
농림·수산·식품	18.1	17.3	-0.9	-4.8
국 방(일반회계 총계)	33.0	35.5	2.5	7.6
외교·통일	3.9	4.1	0.2	5.1
공공질서·안전	14.5	15.2	0.7	4.9
일반공공행정	55.1	58.6	3.5	6.3
총 지 출	325.4	346.6	21.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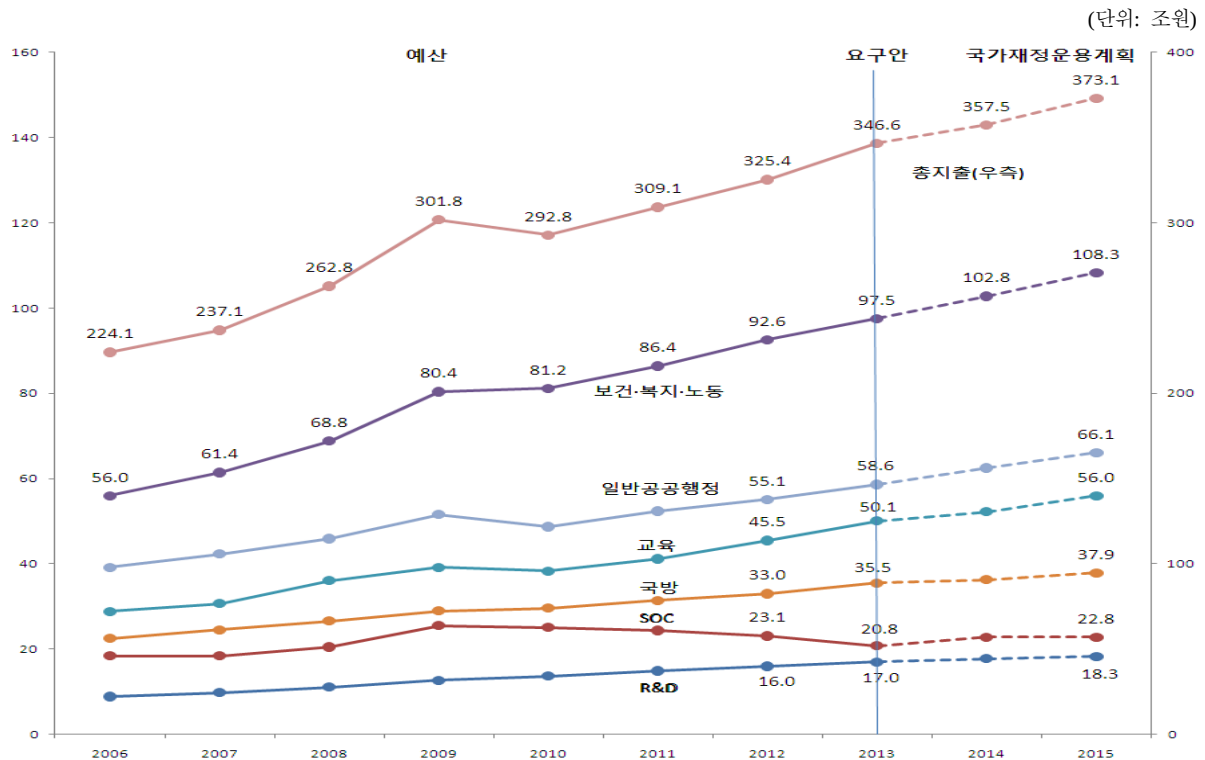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큰 분야는 R&D(8.9%), 외교·통일(7.9%), 보건·복지·노동(7.2%), 교육(6.8%) 등이며,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Δ 0.6%), SOC(0.3%), 농림수산식품(0.6%), 환경(4.5%) 등이다. 동 기간 중 R&D, 보건·복지·노동,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된 후 201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4대 강 사업의 경과에 따라 자원배분 규모가 변동하고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2012. 9)에서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구현 등의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발표(2012. 7)한 R&D분야 예산요구액은 17.0조원으로서 전년대비 6.2%증가한 규모이나, R&D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배분·조정을 요구한 금액은 18.6조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금액이다.

[그림 5]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주: 2006~2009년은 추경 반영한 최종예산이며, 2010~2012년은 예산, 2013년은 예산요구안, 2014~2015년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3. 재정수지

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기준으로 18.1조원(GDP 대비 1.4%)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1년 예산 기준 5.3조원(GDP 대비 0.4%)에 비하여 12.8조원 증가한 규모이나, 2011년 결산 기준 18.6조원에 비해서는 0.5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⁴⁾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예산 기준으로 2011년 25.0조원 적자(GDP 대비 △2.0%)에서 2012년에는 14.3조원 적자(GDP 대비 △1.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1년 결산에 비해서는 0.8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중 △1.1%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2년 전망치 △1.3%보다 0.2%p 개선된 것이며,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및 복지 등 예산 증액소요를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감액 범위 내에서 반영함으로써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4)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2~2016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수지⁵⁾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균형회복 및 흑자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 지연,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지출여건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6] 2012년도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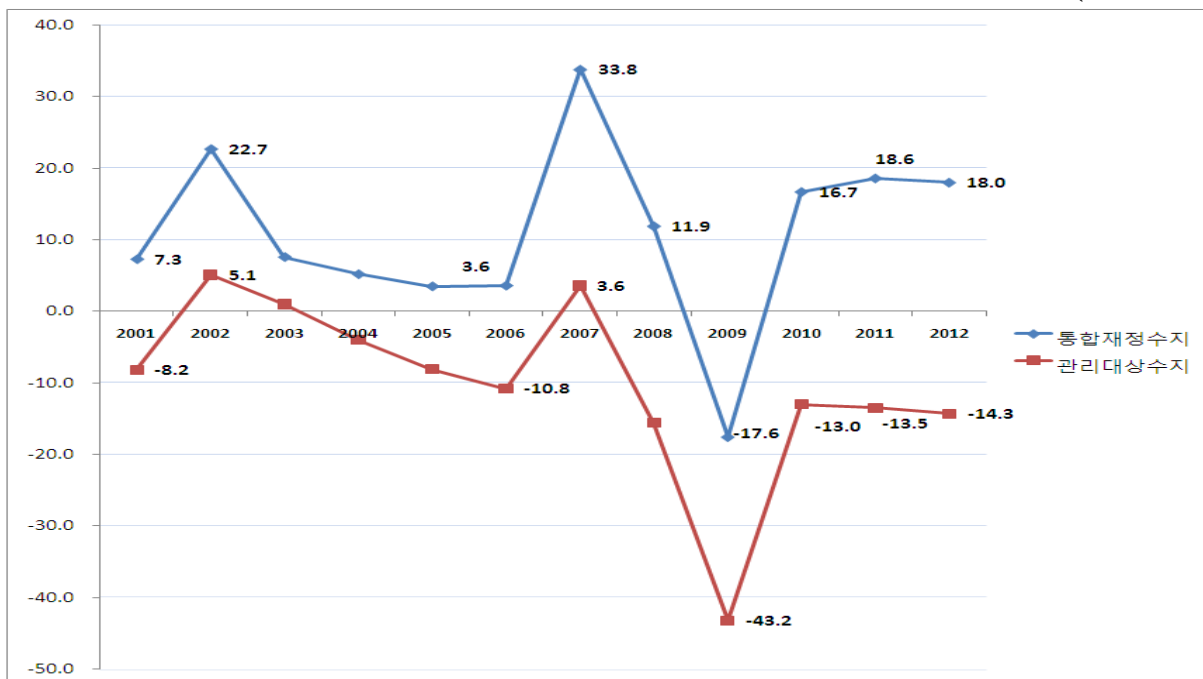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2010년도 결산	2011년도		2012년도 예산(B)	증 감 (B-A)
		예산(A)	결산		
○ 통합재정수지	16.7	5.3	18.6	18.1	12.8
(GDP 대비)	(1.4)	(0.4)	(1.5)	(1.4)	(1.0%p)
○ 관리대상수지	-13.0	-25.0	-13.5	-14.3	10.7
(GDP 대비)	(-1.1)	(-2.0)	(-1.1)	(-1.1)	(0.9%p)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6]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단위: 조원)



5) 2009년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4.1%이다.

4. 국가채무

2012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3%⁶⁾인 445.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를 2011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420.7조원, GDP 대비 34.0%)와 비교해 보면 총 규모는 25.2조원(6.0%) 증가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 전망(3.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309.0조원(GDP 대비 30.2%)이던 국가채무는 2009년 한 해에만 50.6조원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1년까지 3년간 총 111.7조원(36.1%) 증가하였다. 특히 국가채무를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예산 기준으로 총 14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채무 전체 증가율(9.6%) 및 적자성 채무 증가율(13.6%)을 크게 웃도는 24.1%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최근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이후 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흑자 재정을 실현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표 7]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결산	2011		2012 예산	연평균 증가율
				예산	결산		
국가채무 (GDP 대비)	309.0 (30.2)	359.6 (33.8)	392.2 (33.5)	435.5 (35.1)	420.7 (34.0)	445.9 (33.3)	9.6 -
○ 적자성 채무	132.6	168.7	193.3	220.0	207.0	221.0	13.6
■ 일반회계 적자국채	63.0	97.0	119.7	146.7	135.3	149.2	24.1
■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5	47.0	47.0	45.7	45.7	-1.8
■ 기 타	20.4	22.2	26.6	26.3	26.0	26.1	6.4
○ 금융성 채무	176.4	190.9	199.0	215.5	213.6	225.0	6.3
■ 외평기금·채권	94.0	104.9	120.6	138.4	136.7	155.7	13.4
■ 국민주택기금·채권	45.2	48.5	49.3	48.2	48.9	48.5	1.8
■ 기 타	37.2	37.5	29.1	28.9	28.0	20.7	-13.6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2012. 5)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1. 10)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2011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치(3.7%)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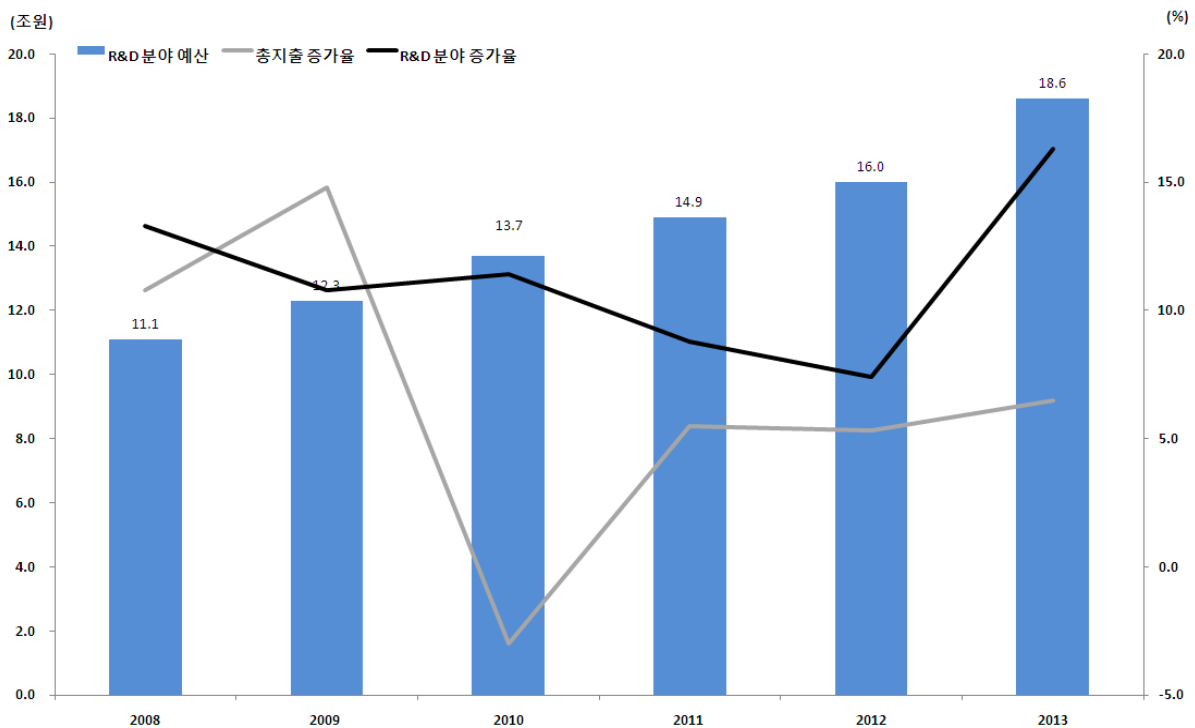
III 분야별 자원배분의 특징

1. R&D 분야

가. 자원배분 현황과 특징

2013년 R&D 분야 예산요구액은 18조 6,438억원⁷⁾으로 2012년 대비 16.3% 증가한 규모이다.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2년 4.9%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총지출 기준 예산요구액(346.6조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R&D 분야 예산 추이



주: 2013년은 요구액 기준

자료: 1. 대한민국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1. 10)

2.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 보도자료(2012. 7)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2012. 8)

7) 이 금액은 각 부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배분·조정을 요구한 금액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6월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R&D예산은 17.0조원으로서 전년대비 6.2% 증가한 규모이다.

2013년 R&D 분야 예산요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관련 기술이 포함된 거대공공 부문이 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IT·융합기술이 포함된 첨단융합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16.3%)을 보이고 있는데, 첨단융합 부문은 R&D 예산요구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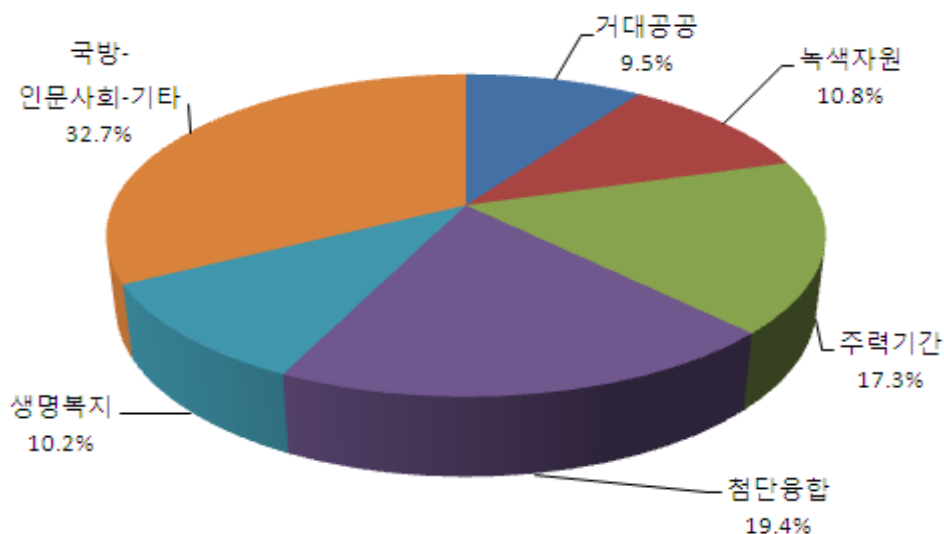
[표 8] R&D 부문별 2013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A)	2013 요구(B)	증 감 (B-A)	증감률 (B-A)/A
거대공공 (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13,248	17,793	4,545	34.3
녹색자원 (에너지·자원·환경·기상)	17,393	20,178	2,785	16.0
주력기간 (기계·소재·지역·중소기업)	28,416	32,222	3,806	13.4
첨단융합 (기초·IT·융합기술)	31,136	36,215	5,079	16.3
생명복지 (생명·의료·농림·수산·식품)	16,656	19,053	2,397	14.4
국방·인문사회·기타(출연연 운영경비·정책연구비)	53,395	60,977	7,582	14.2
합 계	160,244	186,438	26,194	16.3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2012. 8)

[그림 8] R&D 부문별 2013년 예산요구 비중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 정부 역시 2008년 8월에 발표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부 R&D 투자를 20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2년 4.9%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R&D 분야는 총지출 기준 예산요구액(346.6조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R&D 분야 예산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요 구	연평균 증가율
R&D (A)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6.0	18.6	10.7
총지출 (B)	196.9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346.6	6.5
(A/B)	(3.6)	(3.7)	(4.0)	(4.1)	(4.2)	(4.1)	(4.7)	(4.8)	(4.9)	(5.4)	

주: 연평균증가율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총지출 증가율이 14.8%에 이르렀던 2009년을 제외하면, R&D 분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총지출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산요구 기준으로 2013년 R&D 분야 증가율(16.3%)은 총지출증가율(6.5%)의 2배 이상이다.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2013년 예산요구 기준으로 총지출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4.9%)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4.1%) 또는 공공질서·안전분야(4.4%)보다 높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5.0%)와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목표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R&D 예산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0] 2013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조원, %)

	2012		2013 요구	
		비중		비중
보건 · 복지 · 노동	92.6	28.5	97.5	28.1
교 육	45.5	14.0	50.1	14.5
문화 · 체육 · 관광	4.6	1.4	4.3	1.2
환 경	5.9	1.8	5.6	1.6
R&D	16.0	4.9	17.0	4.9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1	4.6	14.3	4.1
SOC	23.1	7.1	20.8	6.0
농림수산식품	18.1	5.6	17.3	5.0
국 방	33.0	10.1	35.5	10.2
외교 · 통일	3.9	1.2	4.1	1.2
공공질서 · 안전	14.5	4.5	15.2	4.4
일반공공행정	55.1	16.9	58.6	16.9
총 지 출	325.4	100.0	346.6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 보도자료(2012. 7)

2005년부터 2009년까지 R&D 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정부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6.6%)은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1.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 총연구개발비의 자원별 비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4%에서 2010년에는 28%까지 증가하였다.

[표 11] 총연구개발비의 자원별 비중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정부 · 공공	66,321	81,775	92,493	108,889	122,702	16.6
민 간	206,313	230,542	251,427	269,612	314,896	11.2
외 국	823	697	1,061	783	950	3.7
총연구개발비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12.5
정부 · 공공: 민간	24:75	26:74	27:73	29:71	28:7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1. 11)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은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하며,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1.00%로 미국(1.18%), 핀란드(1.13%), 아이슬란드(1.06%)에 이어 4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09년)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R&D예산	165,317	31,073	25,858	17,011	15,146	13,210	12,557	12,229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2011. 8)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1.3%로 조사대상 29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정부 R&D 예산 규모가 큰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6~4.9%에 불과하며, GDP 대비 R&D 예산 비중도 0.70~0.8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

(단위: %)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영 국	프랑스
증가율	24.5	17.1	13.4	11.3	7.9	4.9	4.3	4.3	1.6
순 위	1	2	3	4	11	23	25	26	29

주: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2011. 8)

[표 14]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 (2009년)

(단위: %)

	미 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영 국
GDP 대비 R&D예산 비중	1.18	1.13	1.06	1.00	0.87	0.78	0.75	0.70
순 위	1	2	3	4	8	15	17	18

주: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2011. 8)

따라서 R&D 예산 규모의 확대 보다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 정책에서 선도형 연구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 R&D 예산 중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실 실패제도 도입 등 창의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예산사업

(1) 개인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은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대학의 연구기능을 높이고,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개인연구지원사업의 확대는 2008년에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⁸⁾에서 이공계교수의 개인·소규모 연구 수혜비중을 2012년까지 35%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⁹⁾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 등 개인 연구지원 사업의 예산을 연평균 14% 이상의 증가율로 확대하여 2009년 5,000억원이던 개인 연구지원 예산은 2012년에 8,0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예산요구는 8,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5] 개인연구지원사업 예산 추이 및 2013년 예산요구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요구	연평균증가율 (2009~2012)
개인연구지원	500,000	650,000	750,000	800,000	820,000	17.4
일반 연구자 지원	254,776	355,000	398,000	427,000	447,100	19.6
리더 연구자 지원	35,224	50,000	53,000	57,000	50,900	18.5
중견 연구자 지원	210,000	245,000	299,000	316,000	322,000	14.8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2012. 4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2012. 8)

8) 기획재정부 등,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577 Initiative」, 2008. 8

9) 이공계 교수 중 개인·소규모 연구 수혜비중(2007년 13%)을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5%로 확대

※ 미국 NIH의 연구과제 선정률(2006년): 37%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동 사업으로 지원된 과제 수는 2009년 6,273건에서 2011년 9,63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10,064건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표 16]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지원 과제수 추이

(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계획)	2013 (계획)
개인연구지원	6,273	8,497	9,633	10,064	10,928
일반 연구자 지원	4,676	6,745	7,726	8,095	8,895
리더 연구자 지원	50	66	72	75	71
중견 연구자 지원	1,547	1,686	1,835	1,894	1,9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6)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는 기초과학과 첨단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 예산의 합계액은 2,300억원이다.

[표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2011 결산						2012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요구	예산
100	-	100	100	-	-	4,000	2,2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4)

동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5조 1,8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조 2,1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예산요구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지원 사업을 분리하였는데, 두 사업의 예산요구액 합계액은 2,600억원이다.

[표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투자계획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소 계	2014~ 2017	합 계
기초연구 지원 (연구단, 대형시설·장비, 해외기관 유치 등)	56	3,200	4,200	7,456	28,000	35,456
연구기반 조성 (본원·캠퍼스 건설, 정주여건 조성 등)	-	400	2,300	2,700	6,000	8,700
중이온가속기 구축	44	460	1,000	1,504	3,100	4,60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및 공동 R&D 등)	-	40	400	440	2,600	3,040
합 계	100	4,100	7,900	12,100	39,700	5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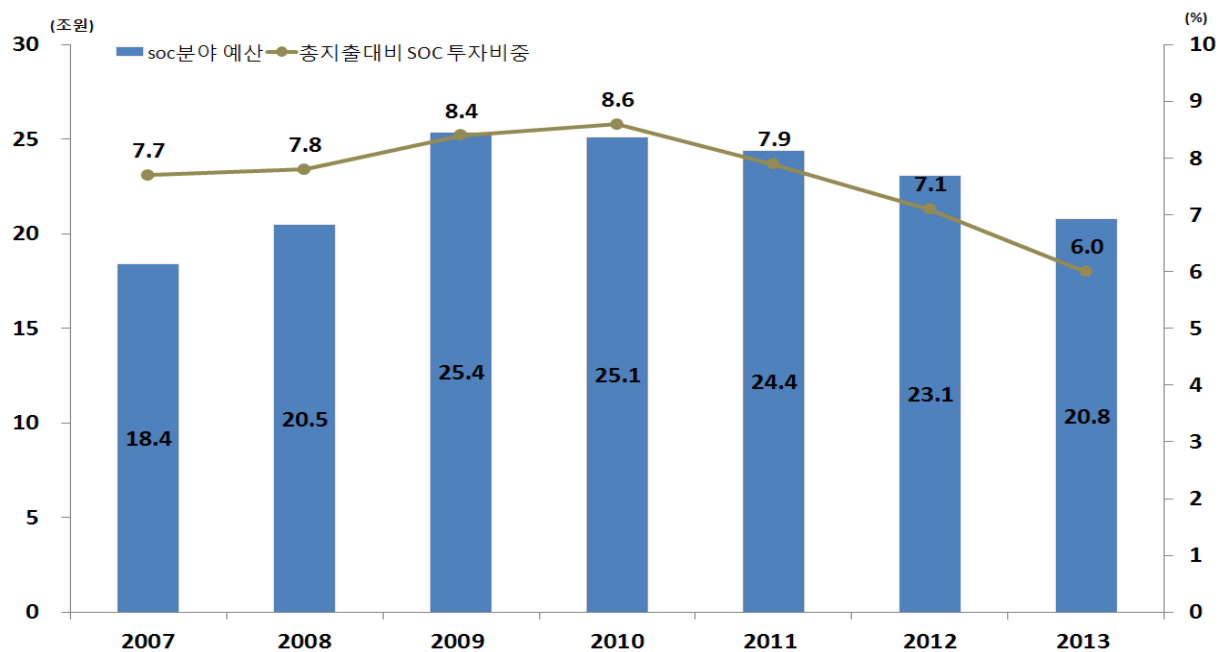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5)

2. SOC 분야

가. 자원배분 규모 및 특징

2013년도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20.8조원으로 2012년 대비 2.3조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3년 전체 분야별(12개) 예산 중 SOC 분야 예산의 2012년 대비 감소폭이 △10.1%로 가장 크다.

[그림 9] SOC 분야 예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SOC 분야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8%에서 8.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지출 대비 6.0%로 낮아지고 있다.

[표 19] SOC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SOC 재정규모(A)	20.5	25.5	25.1	24.4	23.1	20.8
총지출(B)	262.8	301.8	292.8	309.1	325.4	346.6
총지출 대비 비중(A/B)	7.8	8.4	8.6	7.9	7.1	6.0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3년 SOC 분야 예산요구액 규모 20.8조원은 작년에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2년 SOC 분야 예산규모액 보다 2.0조원 감소하였고, 총지출 대비 분야 비중도 0.6%p 낮은 것¹⁰⁾으로서, SOC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당초 계획보다도 더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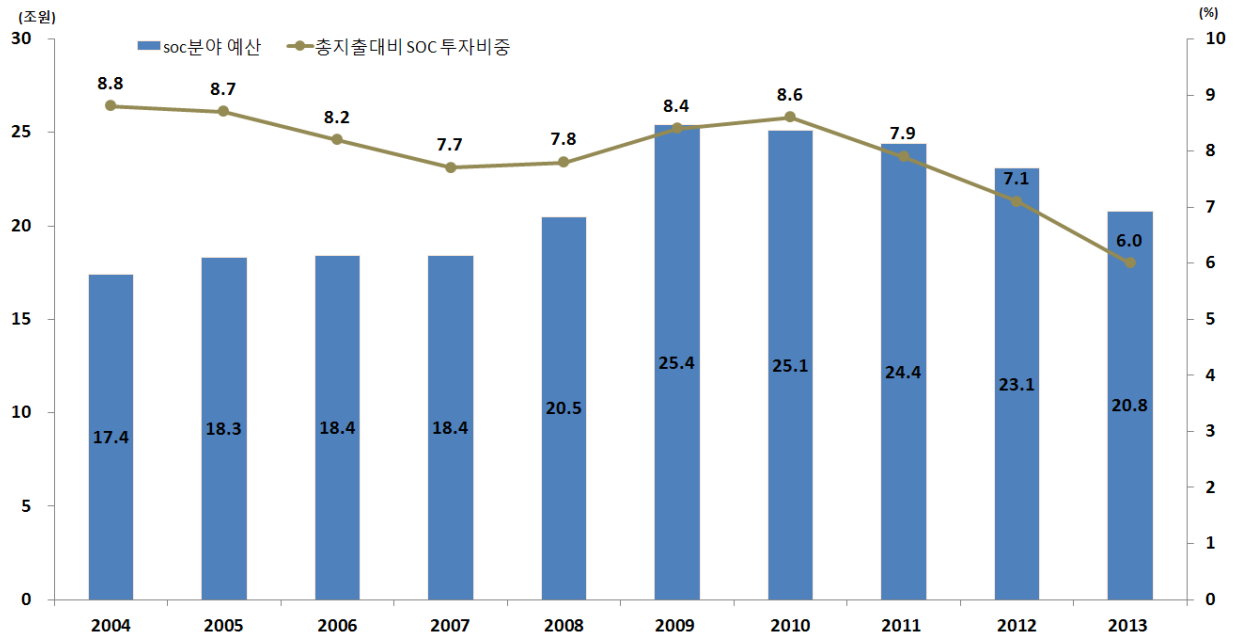
SOC 분야 재정규모는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지출 대비 SOC 재정투자 비중은 1990년대 9.8~17.1%¹¹⁾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총지출의 6.0% 수준이다¹²⁾.

10)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 총지출규모는 341.9조원이고, SOC 분야는 22.8조원으로 예상함

11) 이는 일반회계 대비 SOC 지출 비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 2006. 10)을 참조

12) 2012년도 예산안 요구안에서는 총지출 대비 6.3%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확정결과 7.1%로 상향조정됨

[그림 10] 연도별 SOC 분야 재정규모: 2004~2012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SOC 분야는 1980년대 이후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국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등 SOC 시설이 선진국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고, 복지 분야 등 타 분야 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0] 부문별 SOC 스톡 추이: 2000~2009년

	2000(A)	2002	2004	2006	2009(B)	B/A
도로연장(천km)	88.8	96.0	100.3	104.2	105.0	1.18
고속도로연장(km)	2,131.2	2,778.1	2,923.0	3,102.6	3,376.0	1.77
철도연장(km)	3,123.0	3,129.0	3,374.1	3,392.0	3,377.9	1.08
항만하역능력(백만톤)	430.4	486.5	523.5	682.3	793.0	1.84

자료: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2010)

[표 21] 국토면적당 도로연장(2009년 기준)

(단위: km/km²)

	한 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 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1.05	0.68	1.72	1.73	1.62	0.65

자료: 국토해양부, 「2010 도로업무편람」(2010)

[표 22]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시설의 OECD 및 G-20 순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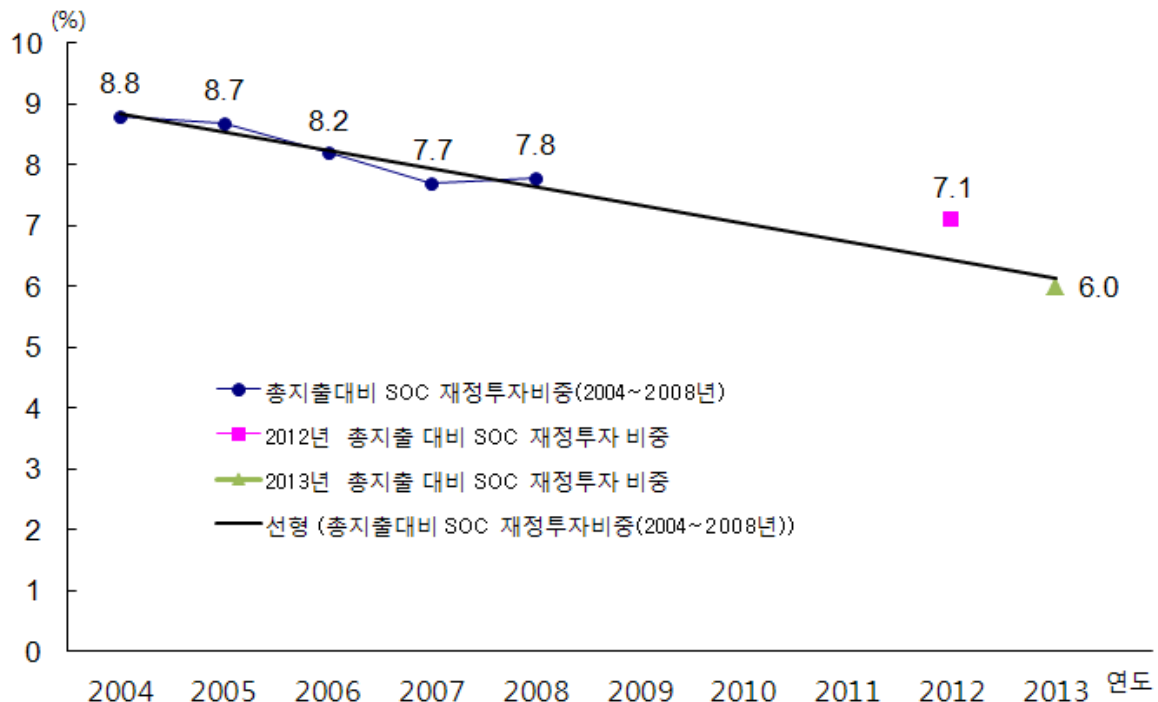
구 분			국가 중 순위	비 고
도 로	OECD회원국	국토면적당 총 도로연장	16	30개국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연장	5	
		국토면적당 국도연장	8	
		국토면적당 지방도연장	17	
	G-20국가	국토면적당 총 도로연장	5	20개국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연장	1	
		국토면적당 국도연장	3	
		국토면적당 지방도연장	6	
철 도	OECD회원국	국토면적당 총 철도연장	16	30개국
		국토면적당 복선연장	15	
	G-20국가	국토면적당 총 철도연장	6	20개국
		국토면적당 복선연장	6	

자료: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2010)

다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략에 따라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추세를 거슬러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되는 등 이와 같은 특수한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C 재정투자 추세¹³⁾에 맞추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3) 2004년부터 2008년까지(2009년 및 2010년 제외) 총지출대비 SOC 재정투자 비중의 추세에 맞추어 2012년도 투자 비중을 추정하면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와 유사함

[그림 11] 총지출 중 SOC 분야 재정투자 비중 추세: 2004~2013년



주: 추세선은 경제위기 극복과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는 2009년~2011년도를 제외한 2004년부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SOC 재정투자 추세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3년 SOC 분야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 철도, 도시철도, 수자원 등 SOC를 구성하는 9개 부문에서 모두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2012년 예산 대비 감액 규모가 큰 부문은 도로 부문과 도시철도, 수자원 및 산업단지 부문이다. 도로부문과 도시철도부문은 각각 전년 대비 7,608억원($\Delta 10.5\%$), 2,636억원($\Delta 20.0\%$)이 감액되었고, 수자원부문과 산업단지부문은 각각 전년 대비 7,356억원($\Delta 24.1\%$), 2,883억원($\Delta 30.0\%$)이 감액되었다.

SOC 분야 총 예산에서 각 부분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도로(2012 34.5% → 2013 34.9%) 해운·항만(2012 7.3% → 2013 7.2%), 항공·공항(2012 0.5% → 2013 0.5%)부문은 전년 대비 그 비중이 큰 변화가 없고, 철도(2012 23.2% → 2013 25.6%) 및 물류 등 기타(2012 8.2% → 2013 8.7%)부문이 전년 대비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시철도(2012 4.5% → 2013 4.1%)와 수자원(2012 13.2% → 2013 11.3%), 산업단지(2012 4.5% → 2012 3.6%)의 경우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도시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상환지원¹⁴⁾이 2012년 사실상 종료되어 도시철도 경영개선지원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

14) 구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면서 정부가 인수하기로 한 공단의 건설부채에 대한 상환지원이 사실상 2012년에 종료되어 전년 대비 $\Delta 67.5\%$ 수준으로 도시철도경영개선사업비가 감소함

고, 그간 큰 규모로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도에 종료되면서 수자원 부문에 대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신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표 23] 2013년 SOC 부문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조원, %)

	2012 예산(A)	2013 예산요구액(B)	증감액(B-A)	증감률(B-A)/A
SOC 분야	23.1	20.8	-2.3	-10.1
국토해양부 소관	20.3(100)	19.5(100)	-0.8	-3.9
- 도로	7.6(34.5)	6.8(34.9)	-0.8	-10.5
- 철도	5.1(23.2)	5.0(25.6)	-0.1	-2.0
- 도시철도	1.0(4.5)	0.8(4.1)	-0.2	-20.0
- 해운·항만	1.6(7.3)	1.4(7.2)	-0.2	-12.5
- 항공·공항	0.1(0.5)	0.1(0.5)	0.0	0.0
- 물류 등 기타	1.8(8.2)	1.7(8.7)	-0.1	-5.6
- 수자원	2.9(13.2)	2.2(11.3)	-0.7	-24.1
- 지역 및 도시	0.9(4.1)	0.8(4.1)	-0.1	-11.1
- 산업단지	1.0(4.5)	0.7(3.6)	-0.3	-30.0

주: SOC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의 사업들로 구성되나 부문별 예산규모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및 예산요구액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3회계연도 예산요구안 개요」(2012. 7)

나. 주요 예산사업

(1) 도로 및 철도 사업

2009년 이후 도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도로부문이 전년 대비 2.7%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10.5%로 크게 줄어들었다. 철도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전년 대비 15.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였다.

전체 SOC 투자규모의 감소로 도로와 철도 부문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철도 부문에 대한 감소가 소폭 이루어져 도로 대비 철도 투자비중은 2006년 2.24:1의 수준에서 2013년에는 1.36:1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연도별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 로(A)	7.4	7.5	7.8	9.4	8	7.3	7.6	6.8
- 전년 대비 증가율	-	1.4	4.0	20.5	-14.9	-8.8	4.1	-10.5
철 도(B)	3.3	3.5	3.6	4.7	5.3	4.4	5.1	5.0
- 전년 대비 증가율	-	6.1	2.9	30.6	12.8	-17.0	15.9	-2.0
비 율(A/B)	2.24	2.14	2.17	2.00	1.51	1.66	1.47	1.36

주: 2012년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예산요구액임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전반적인 SOC 규모 축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도로부문 내에서는 철도와 대체성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2013년 1조 2,129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로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던 2012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2010년 및 2011년에 비추어 볼 때, 전체 SOC 예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25] 고속도로건설사업 2013년 예산요구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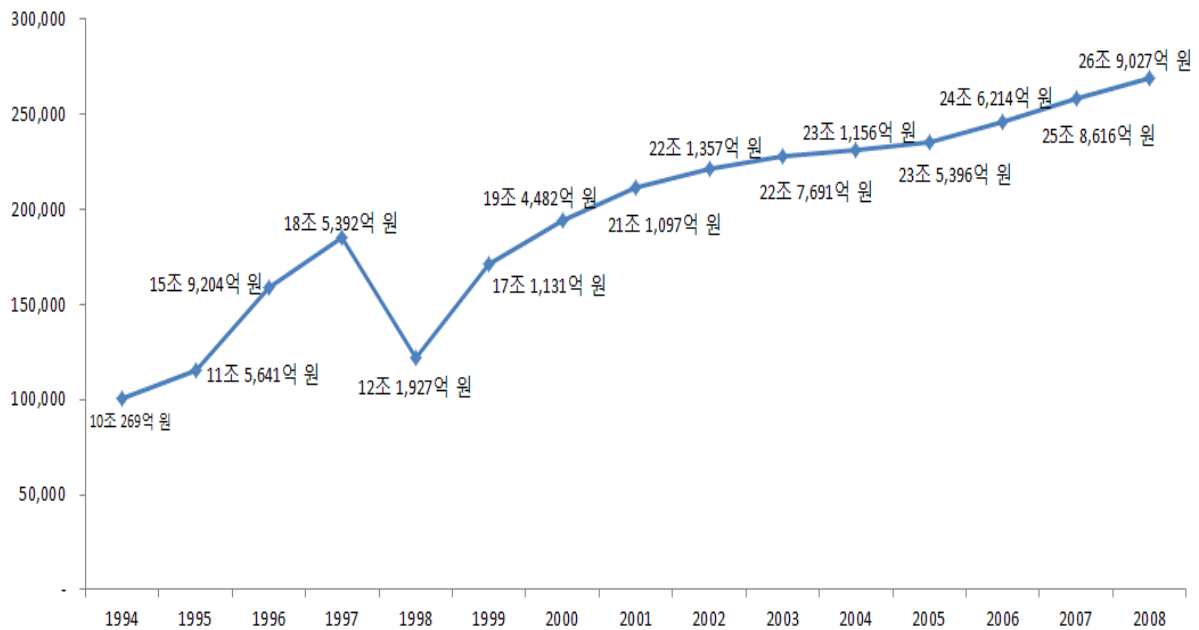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0 예산액	2011 예산액	2012 예산액 (A)	2013 예산요구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11,405	11,474	14,469	12,129	-2,340	-16.2

자료: 국토해양부, 「2013회계연도 예산 요구 개요」(2012. 6)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도로사업에는 시판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대도시권혼잡개선사업이 있다. 교통혼잡비용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6조 9,027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사업 추진에서 도시부 도로사업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여 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13년 광역도로 사업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3.8% 감소한(2012년 1,483억원) 1,130억원이다.

[그림 12] 연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이: 1994~2008년



자료: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한국교통연구원, 각 년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항만개발 및 관리 사업

2013년 항만개발 및 관리 사업의 예산요구안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조 1,578억원이다. 항만개발 및 관리 사업은 신항만 개발 사업과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항만 지원 인프라의 지속 확충과 권역별 주요·일반항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26] 항만개발 및 관리 사업 2013년 예산요구액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액 (A)	2013 예산요구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신항만 개발	7,321	4,491	-283	-38.7
부산항신항만	2,440	1,197	-1,243	-51.0
광양항	406	86	-320	-78.8
인천신항	712	618	-94	-13.2
인천북항	352	483	131	37.2
평택·당진항	386	422	36	9.3
포항영일만항	1,225	488	-737	-60.2
울산신항	1,100	437	-663	-60.3
목포신항	250	415	165	66.0
새만금신항	450	345	-105	23.3
□ 주요항 및 일반항	6,306	7,087	781	12.4
주요항건설	2,326	2,214	-112	-4.8
일반항건설	2,174	2,618	444	20.4
항만시설유지보수, 재개발 등	1,806	2,255	449	24.9
합 계	13,627	11,578	-2,049	-15.0

자료: 국토해양부, 「2013회계연도 예산 요구 개요」(2012. 6)

(3)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정부는 2013년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1조 7,84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 이는 2012년 4대강 사업과 굴포천종합치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 2013년에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등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하천유지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27]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2013년 예산요구액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액 (A)	2013 예산요구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24,749	17,848	-6,901	-27.9
국가하천정비	13,363	8,858	-4,505	-33.7
- 4대강	3,205	-	순감	-
- 국가하천유지보수	1,997	1,571	-426	-21.3
-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	4,030	3,430	-600	-14.9
- 수자원공사지원	3,558	3,302	-256	-7.2
지방하천정비	8,706	7,084	-1,622	-18.6
국가·지방하천 재해복구	971	-	순감	-
굴포천종합치수	260	-	순감	-
경인아라뱃길지원	900	900	-	-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399	606	207	51.9
하천편입토지 보상	150	400	250	166.7

자료: 국토해양부, 「2013회계연도 예산 요구 개요」(2012. 6)

[표 28]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 현황

(단위: km, %)

	합 계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국가하천	3,138	2,490	79.4	524	16.7	124	3.9
지방하천	28,092	16,187	57.6	5,881	20.9	6,024	21.5
합 계	31,230	18,677	59.8	5,405	20.5	6,148	19.7

자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일람(2010. 12. 31 기준)」(2011. 12)

(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2013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60.6% 감소한 6,160억원이다. 정부는 2013년에 기업 입주시기에 맞춘 진입도로 적기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완공 위주(27건)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32건)은 집행 등을 고려한 소요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25건)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만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29]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2013년 예산요구액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액 (A)	2013 예산요구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8,881	6,160	-2,721	-30.6
2012년 완료사업(20)	4,155	-	순감	-
2013년 계속사업(32)	2,185	3,108	923	42.3
2013년 완료사업(27)	2,451	2,745	294	12.0
2013년 신규사업(25)	-	308	순증	-

자료: 국토해양부, 「2013회계연도 예산 요구 개요」(20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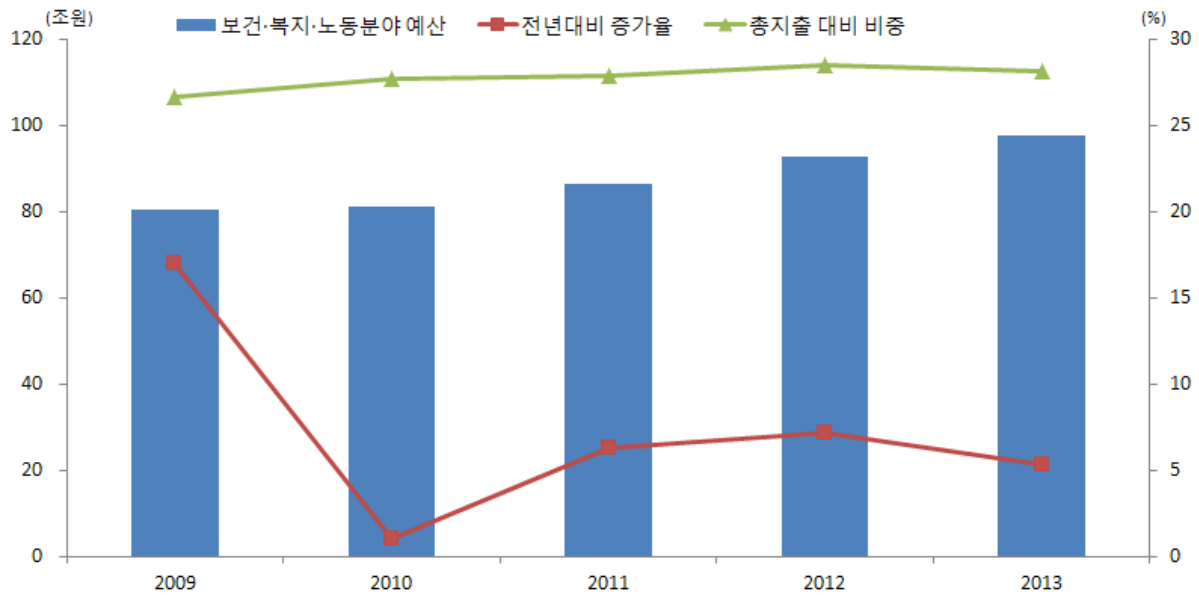
3.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¹⁵⁾

가. 자원배분 현황과 특징

2013년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요구액은 97.5조원으로 2012년(92.6조원) 대비 5.3%(4.9조원)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 6.5%를 하회하고 있다. 총지출 중에서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13년 요구안에서는 28.1%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다.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2009~2013년)은 4.9%로, 총지출의 증가율 3.5% 보다 1.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5) 사회복지, 노동, 보건의료, 주택, 보훈 등 포함

[그림 13]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0] 보건·복지·노동 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요구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노동분야	80.4 (17.0) [26.6]	81.2 (1.0) [27.7]	86.4 (6.3) [27.9]	92.6 (7.2) [28.5]	97.5 (5.3) [28.1]	4.9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요구안의 특징은 첫째 보건 분야 예산이 8.9조원으로 2012년 7.8조원 대비 14.1%가 증가하여 사회복지분야 증가율(4.5%) 보다 약 3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증액요인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8,255억원 증액),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105억원 증액) 사업 등의 증액 요구,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200억 신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표 31] 보건·복지·노동 분야 세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노동분야	80.4 (17.0)	81.2 (1.0)	86.4 (6.3)	92.6 (7.2)	97.5 (5.3)	4.9
○ 사회복지	73.4 (16.7)	73.9 (0.7)	78.9 (6.8)	84.8 (7.5)	88.6 (4.5)	4.8
○ 보건	7.0 (18.6)	7.3 (4.3)	7.5 (2.7)	7.8 (4.8)	8.9 (14.1)	6.2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예산이 크게 증액 요구되었다. 2013년 보육예산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6.5%) 대비 약 4배, 보건·복지·노동 분야 증가율(5.3%) 대비 약 4.9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보육예산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세를 주도하는 양상은 2013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2012년까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확대가 두드러졌다면, 2013년 요구안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예산요구액 4,169억원, 전년 대비 306.2% 증가), 어린이집 지원사업(예산요구액 1,428억원, 전년 대비 82.5% 증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32] 보육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육예산 (증가율)	1.7 (16.5)	2.1 (24.4)	2.5 (16.5)	3.0 (22.2)	3.8 (25.8)

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분야-보육·가족 및 여성부문-보육지원강화프로그램”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셋째 노동부문 예산은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노동부문 예산(요구액)은 13조 4,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465억원) 증가하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816억원 증액),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생계 지원(91억원 신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나. 주요 예산사업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5년에는 기초수급자까지만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2006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로 점차 확대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만 0~2세는 전 소득계층에게, 만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만 5세는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전 소득계층에 지원되고 있다. 2013년에는 만 3~4세에게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전 소득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 기준 만 3~4세 지원예산액(3,828억원) 만큼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만 0~2세 지원아동수는 최근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가 반영되어 2012년 67.8만명에서 2013년 81.2만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액은 2012년 2조 3,913억원에서 2013년 2조 7,456억원으로 14.8%(3,543억원)가 증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대응지방비 부담은 2조 8,123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3] 영유아보육료 지출현황 및 지원아동수 추이

(단위: 억원, 만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출액	국 고	12,822	16,322	20,023	23,913	27,456
	지방비	13,871	17,041	20,509	24,494	28,123
	합 계	26,693	33,363	40,532	48,407	55,579
지원아동수		73.4	87.9	99.1	114.7	116.9

주: 2009~2011년은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2) 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7월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지원연령(만 1세까지 → 만 2세까지) 및 지원금액(월 10만원 → 월 10~20만원)이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지원대상 소득계층이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수는 2012년 9.6만명에서 2013년에는 61.4만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액은 2012년

1,026억원에서 2013년 3,143억원(306.3%) 증가한 4,169억원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지방대응비 부담은 8,686억원을 추정된다.

[표 34] 양육수당 및 지원아동수 추이

(단위: 억원, 만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출액	국 비	173	337	911	1,026	4,169
	지방비	188	365	993	1,112	4,517
	합 계	361	702	1,904	2,138	8,686
지원아동수		6.9	5.2	9.0	9.6	61.4

주: 2009~2011년은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가입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이하)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지원(최대 보험료의 50%)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2년에 2,65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상반기 시범사업과 하반기 본 사업에서 237만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도에는 본 사업이 전면 추진되어 275만명에게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예산액이 전년 보다 1,816억원 증가한 4,384억원 규모이다.

[표 3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2012	2013
예 산 액	2,654억원	4,384억원
지원대상자	237만명 (고용보험 131만명, 국민연금 106만명)	275만명 (고용보험 151만명, 국민연금 124만명)
지원기간	시범사업: 2~6월(5개월) 본사업: 7~12월(6개월)	12개월
사업범위	시범사업: 16개 자치단체 본사업: 전국시행	전국시행

자료: 고용노동부(2012. 8)

(4)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은 무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신속한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신규 편성(91억원)되었다. 동 사업은 무급휴업·휴직, 또는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월 평균 995,400원을 4개월 동안 2,0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장이 이루어졌으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표 36] 휴업·휴직 시 고용보험기금 지원

	2012	2013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에게 지원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 1/2)를 사업주에 지원 - 290억원(근로자 24,568명)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에게 지원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 1/2)를 사업주에 지원 - 319억원(근로자 28,880명)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직접 지원 - 91억원(근로자 2,000명)

자료: 고용노동부(2012. 8)

(5) 주요 공적부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요구안에서는 2012년 3조 321억원 대비 4,694억원(15.5%)이 증가한 3조 5,015억원이 요구되고 있다. 월평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47만명으로 2012년 155만명 대비 8만명(△5.2%) 감소하나, 일반가구 및 시설 수급자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에 따라 증액된 것이다. 수급자수는 2012년 4월 현재 수급자수(143.7만명)에 2013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수급자(2.3만명)를 합하여 추계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급여비를 기존에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던 것을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적정화하고(299,232원 → 343,417원), 10인 미만 시설 수급자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15.1만원 → 17만원).

[표 37]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및 수급자 추이

(단위: 억원, 만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예 산	30,940	31,956	32,218	30,321	35,015
수급자	156.9	155.0	146.9	155.0	147.0

주: 2009~2011년은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2008. 1), 2단계로 65세 이상의 60%(2008. 7), 3단계로 65세 이상의 70%(2009. 1)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2013년 예산요구안에서는 2012년 2조 9,636억 원 대비 3,087억원(10.4%)이 증가한 3조 2,723억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급대상인원(385.6만 명 → 412.5만명) 및 연금액(9.4만원 → 9.7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인원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7.2%에 해당하는 412.5만명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는 법정 비율인 70%에 미달하는 규모이다.

[표 38] 기초노령연금 예산 및 수급자 추이

(단위: 억원, 만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예 산	24,744	26,793	28,115	29,636	32,723
수급자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	363 (69.0)	373 (67.7)	379 (67.0)	386 (67.2)	413 (67.2)

주: 2009~2011년은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1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되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56%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부가급여(소득계층에 따라 상이)를 지급한다. 2013년 예산요구안에서는 2012년 2,943억원 대비 486억원(16.8%)이 증

가한 3,438억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급대상인원은 2012년과 동일하나(32.7만명), 기초급여액(9.4만원 → 9.7만원) 및 부가급여액(계층별 0~15만원 → 2~17만원)을 인상함에 따른 것이다.

[표 39] 장애인연금 예산 및 수급자 추이

(단위: 억원, 만명)

	2010	2011	2012	2013
예 산	1,430	2,827	2,943	3,438
수급자	25.8	30.9	32.7	32.7

주: 2010~2011년은 결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 8)

(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는 정부재정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와 과징금수입액의 50%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와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50%)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며, 2002년 재정위기 에 따른 「재정건전화특별법(2006년 한시법)」 제정으로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2007년에는 특별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여 2011년까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법」을 2016.12.31.까지 연장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과징금의 경우 1999년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수입의 50%를 요양급여비용에 지원토록 과징금 사용용도가 지정되었고, 2009년부터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다.

2013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의 예산요구안은 일반회계 5조 1,69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9,775억원으로 총 6조 1,465억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담배판매량 감소로 2012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40] 건강보험 정부지원 추이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지원	34,830	36,948	38,362	36,718	40,262	46,828	48,614	50,361	54,065	61,465
- 일반회계	28,567	27,695	28,698	27,042	30,023	36,566	37,983	40,794	43,434	51,690
- 건강증진기금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9,567	10,631	9,775

주: 1. 2011년까지는 결산기준, 2012년은 예산기준, 2013년은 예산요구안 기준

2. 일반회계 가입자지원에 과징금지원액 포함(2009년 42억원, 2010년 54억원, 2011년 79억원, 2012년 75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7)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7대 급여중 하나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47만명, 타법 대상자 13만명으로 총 160만명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2010년 3,348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6,388억원(국고 부담분 4,919억원)의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의료급여 예산요구안 편성 시 진료비 미지급금 중 국고부담분인 4,919억원은 미반영한 채, 2012년 예산액 3조 9,812억원 대비 3.4% 증가한 4조 1,163억원을 요구하였다.

[표 41] 의료급여 연도별 미지급금 추이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지급금	902	239	1,069	4,255	8,570	3,738	-	-	3,348	6,388
- 국 고	722	166	823	3,277	6,599	2,878	-	-	2,578	4,919
- 지방비	180	73	246	978	1,971	860	-	-	770	1,469

주 1. 2008년과 2009년은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기존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미지급금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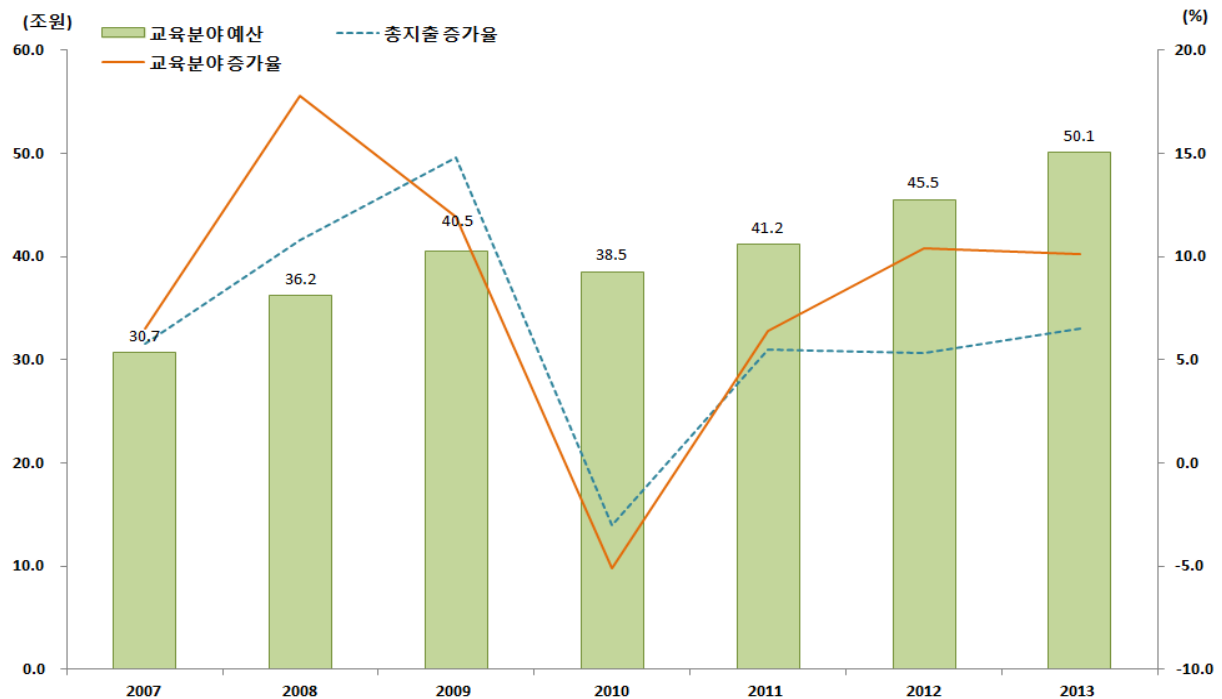
2. 국비와 지방비는 당해연도 발생한 미지급금을 평균국고보조율 77%를 적용하여 산출

4. 교육 분야

가. 재원배분 현황과 특징

교육 분야 예산요구액은 50.1조원으로 2012년에 비하여 4.6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1%p 증가한 것으로 각 부처가 요구한 2013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 증가율(6.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 분야 지출은 정부 총지출 대비 12.8~13.3%였으나, 2012년의 경우 14%, 2013년 요구안의 경우 14.5%로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그림 14] 교육 분야 예산 추이



[표 42] 교육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 분야	26.3 (6.9) [13.3]	27.7 (5.3) [13.2]	28.8 (7.3) [12.9]	30.7 (6.5) [12.9]	36.2 (17.8) [13.0]	40.5 (11.9) [12.8]	38.5 (-5.1) [12.9]	41.2 (6.4) [13.3]	45.5 (10.4) [14.0]	50.1 (10.1) [14.5]

주: 1. 2013년은 요구액 기준

2.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는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조원 증가하는 등 경직적 지출 요구 증가가 총 증가액(4.6조원)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등교육 부문에서 증가된 것으로 고등교육 부문 요구액은 전년 대비 9,600억원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2년에 이어 2013년 예산 요구안에서도 감소하였다.

2012년 예산 대비 증가율은 고등교육 부문이 15.4%로 가장 높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4% 감소하였다.

[표 43] 교육 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2	2013 요구	증감	%
교육분야	45,491,091	50,078,051	4,586,960	10.1
유아및초중교육	38,554,873	42,185,147	3,630,274	9.4
고등교육	6,220,740	7,180,751	960,011	15.4
평생·직업교육	594,837	580,629	-14,208	-2.4
교육일반	120,641	131,524	10,883	9.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부처 안)

나. 주요 예산사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내국세 총액 비율은 2007년 19.4% → 2008년 20.0%(유아 및 방과 후 학교 국고사업 지방이양) → 2010년 20.27%(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로 변경되어 왔다.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규모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여 왔다. 2013년 예산요구안은 2012년 45.5조원에서 4.6조원 증가한 50.1조원으로 10.1%가 증가한 규모이다. 2013년도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안 증가분 4.6조원 중 78%인 3.6조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이다.

[표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 분야	27.7 (-) [13.2]	28.8 (4.0) [12.9]	30.7 (6.6) [12.9]	36.2 (17.9) [13.0]	40.5 (11.9) [12.8]	38.5 (-4.9) [12.9]	41.2 (7.0) [13.3]	45.5 (10.4) [14.0]	50.1 (10.1) [14.5]
교부금	23.8 (-)	24.6 (3.4)	26.2 (6.5)	30.8 (17.6)	30.4 (-1.3)	32.3 (5.9)	35.3 (9.3)	38.4 (8.8)	42.0 (9.4)

주: 1. 2013년은 요구액 기준

2.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는 정부 총지출 중에서 교육 분야 비중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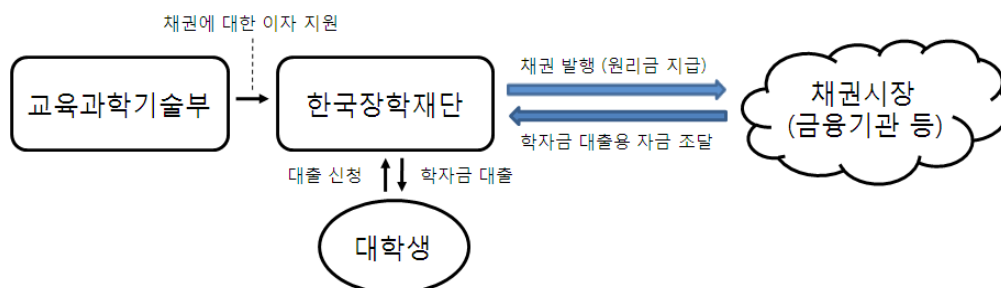
(2) 대학생 학자금 지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¹⁶⁾하고 있으나,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조사¹⁷⁾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¹⁸⁾) 제도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1조 7,5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크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나뉘어진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15] 학자금 대출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의 관계



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2. 6

17)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2011

18) Income Contingent Loan

2011년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합하여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1조 7,468억원이 집행되고, 733억원이 불용되었다.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이 1조 7,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 규모는 3조 77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5] 학자금 지원 사업의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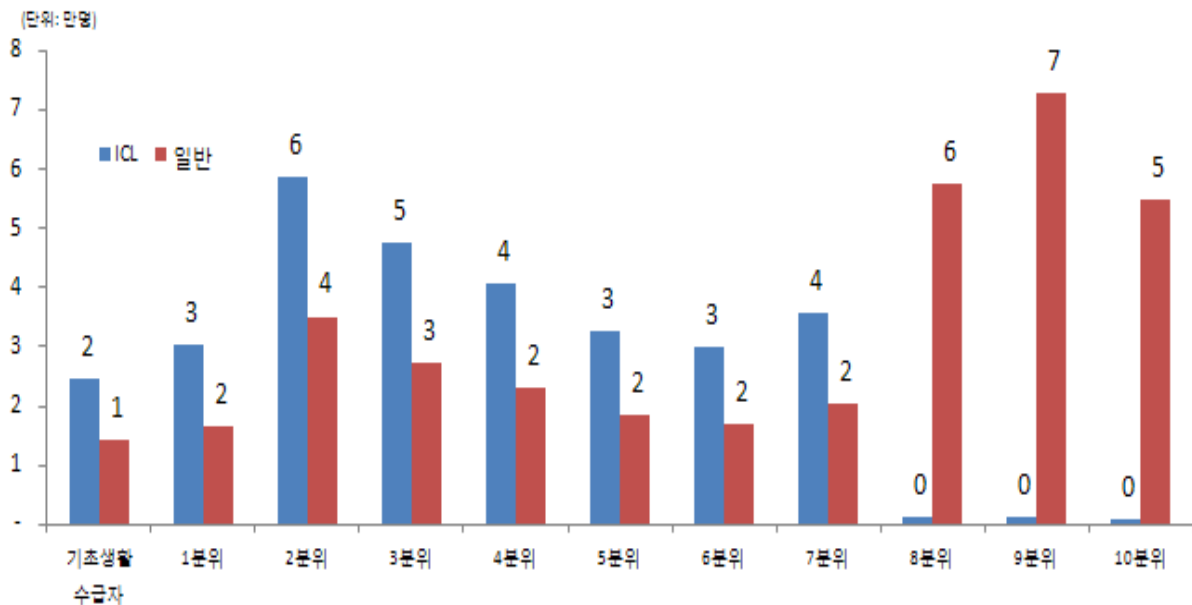
	부처	세부사업	2011				2012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학 자 금 대 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823	191,823	191,823	-	159,349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학연금기금)	161,745	136,343	136,016	328	121,096
	국방부	학자금대부(군인복지기금)	75,220	68,020	56,496	11,524	60,719
	행정안전부	대여학자금융자(공무원연금기금)	737,177	737,177	699,598	37,579	701,252
	농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농특회계)	60,482	60,482	60,482	-	35,507
	고용노동부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고용보험기금)	103,681	103,681	79,786	23,895	75,000
	소 계		1,330,128	1,297,526	1,224,201	73,326	1,152,923
장 학 금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331,250	331,250	331,250	-	-
		국가장학금 지원	-	-	-	-	1,750,000
		우수학생 국가장학	109,520	109,520	109,520	-	92,970
		근로장학사업	81,000	81,000	81,000	-	81,000
	국가보훈처	장학금(보훈기금)	824	824	823	1	742
	소 계		522,594	522,594	522,593	1	1,924,712
합 계			1,852,722	1,820,120	1,746,794	73,327	3,077,635

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수행되며,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중 학자금 대출 지원에 직접 편성된 금액만 표시하였음

자료: 각 부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 소득분위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상환대출의 경우에는 9분위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상환대출의 수혜자별 학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6] 2011년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현황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 2012년의 경우 7,500억원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유형 I)한다. 나머지 1조원은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비율에 따라 대학에 배분하며,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유형 II)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예산요구에 포함된 국가장학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조 7,500억원이다.

[표 46]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장학금 지급 계획

		지 원 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 I 유형	0.75조원	기준지원액: 450만원 - 기초생보자: 100% - 1분위: 50% - 2분위: 30% - 3분위: 20%	장학재단에 출연된 후,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1조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5. 지방재정 분야

가. 지방재정 예산 현황과 특징

지방재정의 2012년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으로 190.4조원이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 177.0조원 대비 13.4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151.1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0.1조원 증가하였고, 교육자치단체 예산규모는 47.7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3.8조원 증가하였다.

[표 47] 2012년 지방재정 예산규모 현황

(단위: 조원, %)

	2011 예산액(A)	2012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자치단체	141.0	151.1	10.1	7.1
교육자치단체	43.9	47.7	3.8	8.7
지방재정 예산순계	177.0	190.4	13.4	7.5

주: 각 연도 당초예산기준이며, 예산순계는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의 이전지출’(2011년 7.9조원, 2012년 8.4조원)을 제외한 예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자치단체는 2007~2011년 동안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이고, 의존수입(교부금+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8%로서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지자체의 의존수입인 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요구안은 72.4조원으로서 2012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8] 2013년도 교부금 예산요구안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증감	증감률
지방교부세	319,664	352,690	33,026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6,777	371,571	34,794	10.3
합 계	656,440	724,261	67,821	10.3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나. 주요 예산 사업

자치단체에게 교부되는 교부금은 대표적인 지방이전재원이자 자치단체로서는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2013년 예산요구안 72.5조원을 감안할 때, 2008~2013년까지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4.3%이다. 교부금중 지방교부세는 2008년 28.1조원에서 2013년 35.3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30.4조원에서 2013년 37.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표 49] 연도별 교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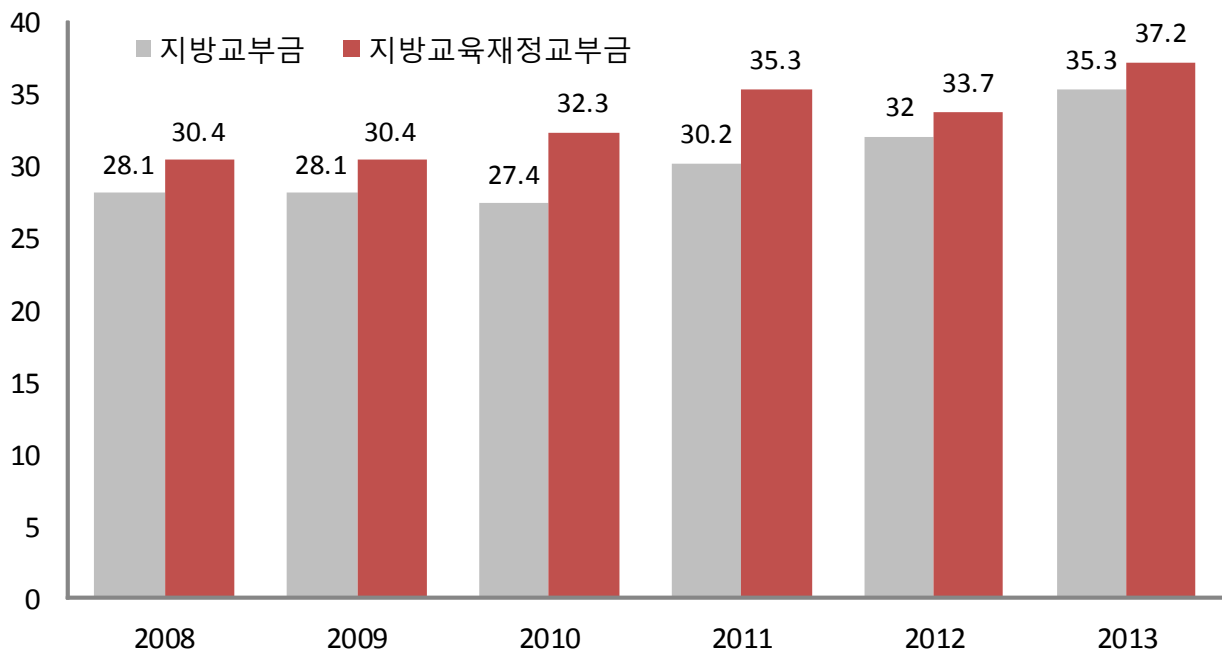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부세	28.1	28.1	27.4	30.2	32.0	35.3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4	30.4	32.3	35.3	33.7	37.2	4.1
합 계	58.6	58.6	59.7	65.4	65.7	72.5	4.3

주: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예산액, 2013년은 예산요구안임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그림 17] 연도별 교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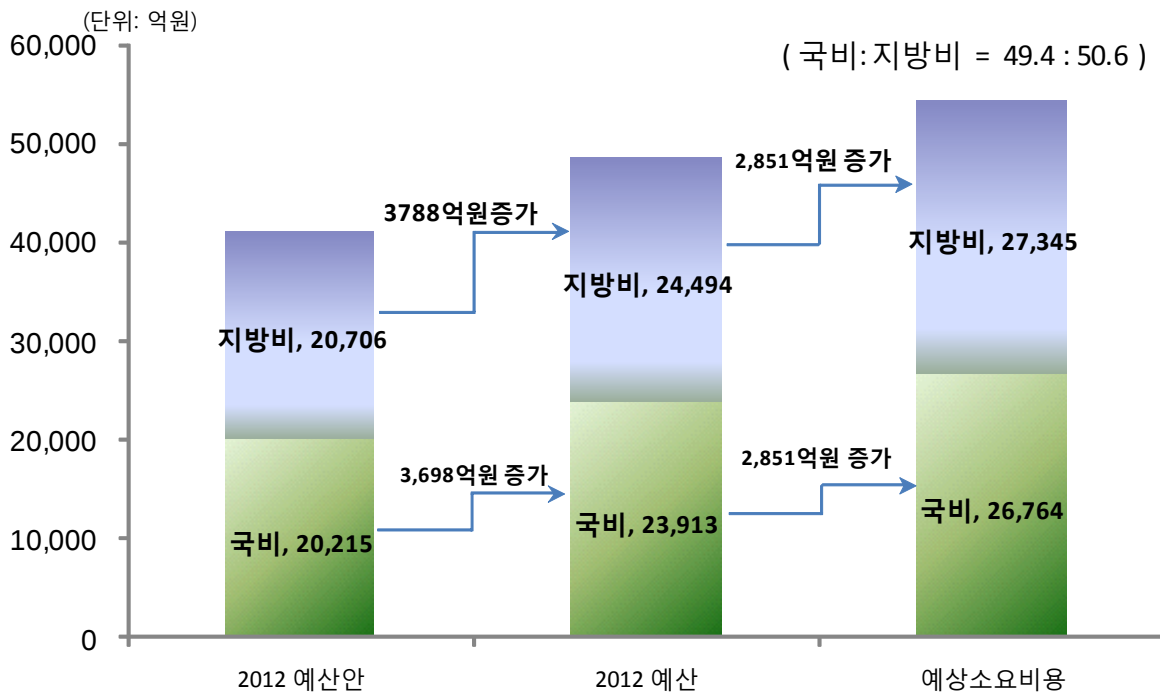


다. 지방재정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 영유아보육료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2011년 말 확정된 0~2세 영유아보육료의 지원대상 확대로 국비 6,549억원, 지방비 6,639억원의 증액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액소요는 첫째,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지원 → 100%지원)로 국비 3,698억원, 지방비 3,788억원이 증가되고, 둘째로는 제도변화로 유발된 지원아동 수의 증가(추가소요 7만명)로 국비 2,851억원, 지방비 2,851억원 증가로 구분된다.

[그림 18]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의한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료의 지방비 증액소요를 예산부족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 등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예산부족액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크고(영유아보육료 자치구비 부담률 서초구 63%, 노원구 21%),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서 소득상위 30% 지원 아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서초구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0.4%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서초구보다 낮은 노원구의 경우 96.7% 증가하였다.

[표 50]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 현황

(단위: 명, %)

	2011년 5월 지원 아동 (A)	2012년 5월 지원 아동			증감 (B-A)	증가율 (B-A)/A
		소 계 (B)	2012년 신규수요	2011년 미지원 소득상위 30%		
서 초 구	648	3,761	883	2,230	3,113	480.4
노 원 구	4,174	8,209	1,382	2,653	4,035	96.7

자료: 각 구청 제출자료(2012. 7)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반면 예산 대비 영유아보육료 지출비중(2011년 기준)이 서초구는 2.7%, 노원구는 9.2%이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의 증가가 서초구는 3,113명, 노원구는 4,035명으로서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가 예산 대비 영유아보육료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원 아동수 증가의 절대규모도 낮았다.

따라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서 지방비 예산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료의 지출비중이 당초부터 낮아서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에 의한 예산소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51] 서울시 서초구, 노원구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

	서초구	노원구
영유아보육료 재원 부담률 (국비 : 시비 : 자치구비)	10 : 27 : 63	30 : 49 : 21
2012년 재정자립도	81.5	22.7
2011년 영유아보육료지원 결산액(A)	8,515	38,392
2011년 예산총계(B)	314,026	418,604
예산 대비 영유아보육료 지출비중(A/B)	2.7	9.2

자료: 각 구청 제출자료(2012. 7)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의한 지방비 예산부족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수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가 확대되어 지방재정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보조율(서울 20%, 지방 50%)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수여건의 악화,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지출의 비효율성

최근 지방재정의 재정력 및 재정건전성 지표가 2009~2010년 경제위기 당시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2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2.3%로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지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상 어려움은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2011년까지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연평균 2.8%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은 9.3%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연평균 13.8% 증가하였다.

지자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인건비 등 사회복지 사업과 필수경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 전소득계층)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 6,639억원(추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재원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영유아보육료 재원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추경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자체 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경전철 사업 연간 적자보전액 추정치가 부산-김해 경전철 800억원, 용인 경전철 850억원, 의정부 경전철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지자체 추경 증액으로 SOC분야 지출을 5.4조원 증액시킨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9조원 증액하는데에 그쳤다.

(3) 지방소비세의 국세이양비율(부가가치세 전환률) 상향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5%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국세이양비율, 즉, 부가가치세 전환률을 현행 5%에서 10%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감세와 부동산경기 침체, 복지지출 급증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대처하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세원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환률 상향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원을 축소하게 되고 지방소비세 증액이 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원 확대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사무의 대폭적 지방이양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세원이양 확대는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MEMO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